

# 테크노파크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 병 일\*

## 1. 테크노파크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 1.1. 테크노파크 법률의 입법과정

1996년 하반기부터 영남대는 학내 연구인력 및 시설을 지역의 산업기반시설과 연계하여 하나의 산학연구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미국식 실리콘밸리와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 정부의 통상산업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구상중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업을 정부주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영남대는 모든 know-how를 통상산업부에게 일임하면서, 운영주체 중의 한 기관으로서 사업공모에 응하게 되었다. 1997. 4. 24. 통상산업부는 기술연구집단지단지 시범조성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국에 공모하면서 처음에는 전국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중도에 이를 변경하여 6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1997. 12. 23. 영남대가 주축이 된 경북테크노파크는 안산, 대구, 송도, 광주 전남, 충남과 함께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고, 뒤이어 1997. 12. 29. 통상산업부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국고 16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라는 특별사업을 시행하면서 근거법령을 제정하지 않아서 사업에 애로가 있게 되자 산업자원부(통상산업부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변경됨.)는 테크노파크 관련 입법을 서두르게 되었다. 1998. 4. 8. 영남대에서 열린 제 2회 전국 테크노

---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파크 협의회 워크 샵에서 처음으로 가칭 테크노파크 조성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제안되었고, 이에 대하여 각 테크노파크사업단에서 각종 의견이 개진되었다. 여기에서는 주관기관의 대부분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국립대학인 다른 5개소의 테크노파크와는 달리 경북테크노파크는 사립대학인 영남대학이 주체가 되어 있었고, 특히 사업의 대상지역이 사립대학내의 교지라는 점에서 다른 테크노파크와는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민회의(후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변경)와 자민련 그리고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테크노파크 관련법안이 절충적인 형태로 입법되었다. 즉 박광태, 김종학, 한화갑, 구천서, 김원길, 이태섭, 천정배 의원 외 130인이 발의한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안)"과 신영국, 강성재, 강현욱, 김호일, 맹형규, 박근혜, 안재홍, 이규정, 전용원, 제정구, 한승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테크노파크 단지 조성 및 지원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1998년 8월 22일과 8월 27일 각각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19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1998. 9. 1.)에서 2개 법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의 2개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테크노파크 관련 법으로 마련된 법안이 바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1998.9.23, 법률 제 5578호)(이하 "산기법"이라 한다)이다. 이와 같이 산기법이 국회에서의 각 정당간의 논란으로 인하여 절충적 변형화된 형태로 입법화되다 보니 테크노파크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등 테크노파크 조성에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빠지게 되어 이후 테크노파크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 1.2. 테크노파크 법률의 특징과 문제점

테크노파크에 관한 법률인 산기법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매우 시사할 바가 많은 법률이다. 주지하다시피 1997년 겨울에 불어닥친 IMF사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사상누각이었는가를 명백하게 밝혀 준 하나의 시금석이었다. 그동안 고도성장의 전인차 역할을 하였던 대기업집단 즉 재벌그룹들이 얼마나 부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고 국가가 안정적인 경제구조하에서 국민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건설하고 알찬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에 터잡은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사 이래 가장 격심한 실업사태에 대하여 고용에 대한 구제를 대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각 대학에 테크노파크 법인을 인가 설립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지방별로 미취업자나 고등기술인력이 고용되거나 그들 스스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테크노파크 사업의 시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률보다도 더 큰 메리트를 가진 법률이 바로 테크노파크 관련 법률인 산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법은 여야간의 명분싸움으로 기형적인 법률형태의 색깔을 띤 법률이기는 하지만 이 법률의 취지를 잘 살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 즉 대만 못지않은 첨단 창업 중소기업의 천국이 될 것이고 이에 터잡아 향후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대 변혁이 올 수도 있는 아주 의미깊은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산기법은 기업, 대학, 연구소등의 인적 물적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산기법은 연구인력과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시킨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가진 법률이고, 이러한 장소적 개념의 중요성이 종래의 다른 법률과는 차이가 있는, 향후 이 법률의 입법 전망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종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을 지식과 기술집약적인 형태의 중소기업으로서 개념정의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주로 자금지원 혹은 금융지원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은 어떠한 장소에 근거를 하여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과 첨단기술, 새로운 아이디어가 집약된 최첨단의 중소기업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소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향후 테크노파크(법률에서는 산업기술단지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이 개념은 국회의 각 정당이 동시에 입법제안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절충적인 개념으로써 등장한 것이다.)사업의 성공은 이러한 장소에 입주하는 창업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이나 사업시행자인 테크노파크 법인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나 법적으로 제도적 보장과 지원을 해주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테크노파크사업의 시행자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입주 기업들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한 경우에 해당 재단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예산과 같은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 아니한 재단법인으로서는 그 부담을

하는데 힘들고 결국에는 테크노파크 사업이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산기법 제20조에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산기법의 후속조치인 조세관련 법률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테크노파크 관련 세법

### 2.1. 테크노파크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중요성

산기법 제20조상의 세제상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테크노파크는 단순히 기업, 대학, 연구소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시킨다는 장소제공의 의미밖에 없게 되고, 나아가 그러한 장소에 집중시키는 유인책이 없게 되면 원래 테크노파크를 만들 당시의 인적·물적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종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테크노파크를 미국의 실리콘벨리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처럼 세계적인 창업투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산기법과 유사한 장소적 개념의 입법으로서는 1970년에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입법된 수출자유지역 설치법(1970.1.1.법률 제2180호)이 있다. 이 법은 그 당시 열악한 수출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상의 획기적인 지원제도로써 입법 시행되었고, 이러한 마산, 익산등에 설치한 수출자유지역의 개념을 테크노파크의 개념에 대입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제도상의 지원제도는 특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들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그 지정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지원하는 부문이 대부분 금융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실상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단지 금융지원을 받아 이를 기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로 지정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 그러한 지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한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로 된다고 하는 법적인 보장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테크노파크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모든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로서 하는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는 다르게 당연히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이들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계상의 지원대책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보다 좋은 조건의 세제상 제도상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 획기적인 세금 부담의 경감조치 및 제도적 보장이 뒤따라야만 테크노파크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테크노파크 사업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일본이나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대만의 과학산업단지보다도 훨씬 훌륭한 성공작품으로 부각되어 국가 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기법은 테크노파크 사업의 시행자로서 재단법인을 상정하고 있고, 이러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은 대부분 토지나 건물을 입주기업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규모의 창업중소기업인 실정이다. 산기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테크노파크 입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임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각종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테크노파크사업을 위하여 건축한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형 건물을 입주 창업 중소기업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관

리하는 행위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도록 입법조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사업은 국가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구조의 획기적인 변환을 가져 올 수도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정책적인 목표달성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초 산기법 제20조를 입법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조세감면규제법(이 법은 1998.12.28, 법률 제 5584호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이나 지방세법등에서는 아직 테크노파크와 관련한 세금감면규정을 입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2.2.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정 배경

종래의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이다. 이 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온 법률이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입법형태의 법률이 필요하게 되어 1998. 12. 28.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개별 지원제도별로 명시하여 개별 조항마다 적용시한을 규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3조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기법 제20조상에서도 관계법률에 의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사업에 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조 제 1항 제 27호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 3. 산기법의 개정안

#### 3.1. 개정이유

현행 산기법 제20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은 1998.12.31. 폐지되고, 1998.12.28. 제정되고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산기법 제20조의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산기법 제20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 59조)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을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조세의 종류와 그 부과·징수의 근거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절차, 세율등을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적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공정하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으로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불소급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납세자의 권리보호원칙 등 5원칙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산기법 제20조상의 규정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향후 조세와 관련한 분쟁을 피하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에 관계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률에 명시적으로 감면조항에 테크노파크 사업이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조세감면규제법 대신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고, 기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현행 산기법 제20조는 감면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로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의 근거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면되는 세금의 종류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등록세 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3.2. 산기법 제20조의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u>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u>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u>부가가치세 인지세</u> 취득세 재산세 <u>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u>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3.3. 산기법 부칙의 개정안

현재 전국적으로 6개소의 테크노파크가 있고 이들은 모두 1998년 산기법이 제정되기 전에 산업자원부에 의하여 민법등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되어야만 테크노파크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기법 부칙에 의하여 그 근거를 만들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나 종래 민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나 모두 산기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동일한 근거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규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없음	<u>이 법 시행전에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테크노파크 법인으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u>



## 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

### 4.1. 개정이유

5년 단위의 적용범위를 가진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오던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 12. 31. 에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감면제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세법과 일반법률의 조세감면규정 및 중과세조항을 이관하여 일관성있게 규정하고,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조세지원의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별지원제도별 적용시한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조세감면의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감면의 기한 연장시 철저한 감면효과 분석을 선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같은 법 및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하여 법률의 이름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각종 세법에서 면세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와는 달리 관할관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그런데 종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대부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9조 제 3항에서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테크노파크사업과 관련된 세법상의 개정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회사에 관한 세제상의 지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의 문제는 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인 데 대하여 후자의 문제는 간접적인 지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이 금융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의 간접적인 지원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실제로 테크

노파크 사업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법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창업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임대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4.2. 조세특례제한법 제 3조의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3.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

### 5.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 5.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테크노파크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기술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테크노파크 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건실하고 창업정신이 투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벤처기업과 관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이미 기존의 연구성과가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즉 아이디어만 있고 그것에 대한 연구성과물이 없는 창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법제도상의 지원이 되어 버렸다. 또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금융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대출지원이 필요할 때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현행 금융제도 및 관행에 비추어 사실상 물적담보와 같은 담

보능력이 전혀 없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책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금융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금융을 받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제도를 악용한다는 면도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지원조차도 실제로는 이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간접적인 지원형태인 세제상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기술단지 즉 테크노파크라는 특정한 지역내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 중에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세제상의 지원을 할 경우 테크노파크 사업이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규정상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 및 개발업이 있는 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1항 및 제 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 5.1.1.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1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즉 개인 소득자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는 창업한 사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50%를 감면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테크노파크 즉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도 포함된다고 규정하면 테크노파크단지에 입주하는 창업중소기업은 모두 혜택을 보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1항 제 1호 내지 3호도 역시 농어촌지역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라는 장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다.

#### 5.2.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테크노파크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처음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이미 기존의 중소기업도 분명히 입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의 중소기업으로서만 일 본 보고서의 계획대로 세제상의 지원이 확정된다고 하면 테크노파크에 대

한 수많은 세제상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명문규정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이 테크노파크 즉 산업기술단지내에 입주하여 연구 및 개발업을 할 경우에도 세제상의 지원 즉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테크노파크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5.2.1.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제 1항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u>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u> 을 포함한 다), 방송업, —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5.3.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 8조 제 3항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 및 개발업(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포함시키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사무자동화기기를 기증할 경우 기증한 내국인 및 내국법인이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정상황이나 설비투자가 열악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창업시에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없는 입법적 불비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대통령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 5.3.1. 조세특례제한법 제 8조 제 3항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7조 제 3항 신설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없음	법 제 8조 제 3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업을 포함한다. 그외 중소기업의 범위는 입법자가 정하면 된다.

### 5.4.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 9조에 의하면 제조업, 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창업중소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소요 자금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처리하게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면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 제 7호에 의하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연구 및 개발업에 “산기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업을 포함한다”를 추가적으로 삽입하게 되면 테크노파크사업에 참여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이 있게 된다.

### 5.5.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제 1항에서는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기술인력개발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에서는 법 제 10조 제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 8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1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 제 7호의 연구 및 개발업에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추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 5.6.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의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나 벤처기업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받았을 경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인 법인도 역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주식매입선택권 즉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을 들고 있고, 이들의 종업원, 교수, 연구원 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 6.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회사에 관한 세제상의 지원

### 6.1.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그외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이들 법률은 테크노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해주는 투자회사와 관련된 법률로서 이들 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게 되면 간접적으로나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 될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들 법률에 의하여 금융지원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이 성공을 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금융지원 투자회사들이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 창업투자회사들로서는 투자이익으로 인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투자회사들은 실패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성공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들 투자회사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지원을 한 투자회사들의 출자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비과세혜택을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게 투자한 투자회사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테크노파크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3조 제 1항에 이들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이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 6.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은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벤처기업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도 역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회사들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그러한 이익이 투자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많은 투자회사나 금융업자가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 6.2.1. 조세특례제한법 제 13조 제 2항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u>산업 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u>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6.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4조 제 1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많은 투자회사들이 테크노파크에 출자 내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창업후 3년이내인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이거나 기존 중소기업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지 3년이내인 경우에 그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소득자들이 출자를 하게 될 것이다.

## 6.4.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4조 제 2항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 2항 제 1



호 내지 11호의 금융기관 즉 은행, 농수축협,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나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적 투자이익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면 기관투자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 6.5.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4조 제 4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14조 제 4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을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투자한 투자조합들에게도 배당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종합소득과세상 혜택을 주게 되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들의 투자가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 6.6.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제 1항에서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 즉 엔젤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당해 엔젤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거주자가 직접 막바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두고 있다. 이러한 종합소득공제 혜택을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소득자에게도 주게 되면 테크노파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제 1항 제 3호 와 제 4호의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6.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융자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한 금융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주게되면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테크노파크 사업에도 투자를 하게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부여하게 된다.

## 7.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 7.1.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세액공제

내국인 즉 개인소득자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이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하여 주게 되면 개인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익년도 종합소득신고시에도 소득세상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기부금제가 활성화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대한 금전기부 뿐 아니라 현물기부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어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기부금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기부받거나 기부금으로 건물등을 건축하거나 연구비 조성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기부금의 종류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테크노파크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뿐 아니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에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생각전대 포함된다고 하여야 기존의 6개 테크노파크 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용이하게 된다.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처럼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기부자에게 줄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소득세법 제 34조에서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

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액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하고 이 금액을 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자가 세제상 혜택을 보는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법인세법 제 24조에서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액이고 이렇게 100분의 5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입는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테크노파크에 대한 기부금에도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도액을 테크노파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이나 20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7.1.1.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테크노파크의 성공여부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창업중소기업과 테크노파크사업 시행자인 재단법인에 대한 정부 및 창업자, 국내기업들의 지원과 관심, 투자에 달려 있다. 그러한 지원이나 관심 및 투자에는 입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뿐 아니라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일반 봉급생활자나 대기업의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 24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의 지정기부금을 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 24조 제 2항의 기부금과 결손금을 합한 합계액을 차감한 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테크노파크 법인에 기부금을 낸 내국법인은 소득금액의 5%의 범위안에서 출연한 기부금을 손금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테크노파크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테크노파크의 재단법인에 기부금을 출연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에서 손금처리로 인정받아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면 개인 소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의 지정기부금을 출연한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 34조 제 2항의 기부금과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소득금액의 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테크노파크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테크노파크의 재단법인에 기부금을 출연한 개인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입법상의 기술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제 1호 타목에 근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에 입법하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 제 33호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입법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으나 전자의 방법 즉 대통령령으로 입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 7.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재단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테크노파크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임대하여 주고 이들 입주기업으로부터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얻게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사업을 한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면 소득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 제 1항에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7.3. 부가가치세의 면제

1976년 12월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와 유흥음식세의 7종류의 세목을 대체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제는 매출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기회도 잃게 되는 점에서 영세율과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면제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 1항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과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이 있다. 산기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즉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면 테크노파크 법인이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무구조나 예산사정이 영세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재화나 용역공급계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적용을 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테크노파크 즉 산업기술단지내의 시험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초기에 생산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창업 중소기업들이 시장확보에 우월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 1항과 제 106조 제 2항에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그리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규정을 입법하면 될 것이다. 이들 규정의 유효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하면 현재의 테크노파크사업들이 대부분 제 1차 사업연도를 2003년까지로 한 것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 7.4. 특별소비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9조는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인 바, 테크노파크 단지에 입주한 창업 중소기업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연구용의 기본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게 되면 입주중소기업이 연구 및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7.5. 인지세의 면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16조 제 1항은 일정한 과세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부과하는 인지세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게 되면 테크노파크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7.6. 증권거래세의 면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17조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사업 관련 투자회사나 엔젤조합들이 테크노파크 입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게 되면 엔젤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들의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된다. 또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투자한 투자회사들의 주식이나 지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게 되면 개인소

투자들이 이들 엔젤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됨으로 결국은 이들 투자회사들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게 된다.

## 7.7. 관세의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 118조에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관세를 경감할수록 규정하면 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7.8. 등록세의 면제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권을 가진다. 그 중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보통세와 공동시설세의 목적세가 있고, 시 군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목적세가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 과세물건에 해당되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과세로서 지방세법상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다. 다른 하나는 면제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가 있다. 면제의 경우에는 비과세와는 달리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조세특례법상의 지방세 면제사유로 열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하는 방법이 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되어 설립된 재단법인은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사립대학을 불문하고 모두 비영리법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테크노파크와 관련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 대통령령으로 비과세로 한다 하여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의료업을 제외하고는 다시금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

부에 등기, 등록 또는 등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테크노파크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 등록세가 부과되고, 또한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 부동산등 재산을 취득할 경우마다 등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사실상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세 면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7.9. 취득세의 면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세물건에는 해당하지만 정책적인 목적에서 지방세법상 비과세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유와는 달리 그 면제를 증명하는 서면을 관할 관청에 내어 신청하여야 한다.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제 1항에서는 취득세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하에서는 테크노파크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테크노파크가 설립되고 난 후 재단법인 이름으로 취득하는 사무실용 건물등 부동산이나 차량등의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기부받았을 경우에도 역시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무구조나 예산이 영세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으로서는 운영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면제조항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세금마다 세금면제사유를 각각 열거하는 것보다는 테크노파크라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중요정책 전반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면제규정을 두어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에 대한 지방세 면제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테크노파크가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역시 개별적으로 면제나 비과세를 규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만약 하나의 면제규정을 둔다고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를 신설하여 "산기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7.10.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

테크노파크재단법인이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재단법인 명의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건물을 창업중소기업과 같은 벤처기업에 임대를 하여 준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의 세제상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방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용도구분에 의하여 비과세되지만 그러나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 107조, 제127조, 제184조, 제234조의 12, 제 245조의 2 등 참조).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사무실 임대와 같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테크노파크사업이 실험단계에 있고, 또한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대학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든지 사립대학이 운영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사립대학이 공동으로 운영주체가 되든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운영주체가 되든지 간에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은 어쨌든 비영리법인이 된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임대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세제상의 혜택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임대행위를 하더라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문제는 현재 모든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문제만은 반드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제107조, 제127조, 제184조, 제234조의 12, 제245조의 2 등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지방세법 제 107조), 등록세(지방세법 제 127조), 재산세(지방세법 제 184조),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 234조의 12), 사업소세(지방세법 제 245조의 2)에 대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 107조를 비롯한 각 규정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그의 취득이나 등기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에서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2 제 1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1998.12.28. 법률 제 5581호로 전면개정되어 종전의 법인세법 제 1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법인세법 제 3조 제 2항으로 옮겨져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 제 3조 제 2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조 같은 항 제 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재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법인인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사무실이나 공장형 아파트 등을 임대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2 제 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79조 제 1항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제 3조 제 2항에 의하여 부동산업이나 임대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수익사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항에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놓으면 결국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훨씬 간편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사무실이나 공장형 건물을 임대하여 주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방세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어 지방세의 비과세가 간편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 79조 제 1항에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시행자인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2 제 2항에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다시말하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것은 실제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국가정책적인 목적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2에서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모두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 제 1항에서도 비영리사업자로서 근거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8. 결론

테크노파크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시도해 온 하나의 실험적인 계획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종래 유지되어온 대기업중심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일거에 혁파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제도에 얽매어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위와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실시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